

2021년 02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68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1년 02 (Vol.68)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1년 3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김영현, 송유미, 최완영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

광주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주거용도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4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국토부,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민관합동 전담조직 1차 회의 개최

국토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부산시,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생활권계획(시범구역) 확정안」 발표

대구시, 서대구역세권 환경개선 위한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 본격추진

광주시, 빈집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울산시, '2050 탄소중립도시, 울산' 선언

울산시,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전북도,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와 코로나 우울증 해소위해 생활권 도시숲 확대 조성

11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발표

행안부, 저탄소·친환경 위해 도시 숲 조성 등으로 '녹색청사' 본격 전환

서울시, 미관·에너지효율 개선 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추가지원

서울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
서울시, 화재사건 비율 높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재해 예방위해 숲가꾸기사업 본격 추진
울산시, 주택 및 공장 대상 '2021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 확대 시행
경기도, 미세먼지 쉼터. 환기시스템 설치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위해 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제주도, 녹지부족 생활권에 자발적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
세종시, 도시 정체성 살리는 특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및 참여 대상지 공모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8

국토부, 「사람중심으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시, 교통약자위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행
대구시, 대구도시철도 '5G 디지털트윈 기반' 시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인천시, CCTV 통합플랫폼을 연계한 스마트도시 기술로 통합사회
안전망 구축
충남도,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전남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해 통합사회안전망 구축
경북도, 지역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기반 마을단위 생활SOC 최적지점 분석
경남도, 재난 구조시스템에 활용 위한 3차원(3D) 건축물 공간정보 구축 추진
세종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투명성등을 위해 심사위원단 구성·운영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1년 02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역량과 2021.02.04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2, 시행'21.6.23)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①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계획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 ③ 공항·항만공사도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④ 그 밖에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주거용도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도시계획과 2021.02.0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는 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 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표고 100m 이상의 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최근 무등산 자락 인근에까지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담았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 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서 사실상 고층·고밀의 주거용 시설로 전용되어 일조·경관·교통·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정하고 하는 사항이다.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녹색건축과, 2021.02.02



국토교통부는 녹색 건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를 2월 2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전담기구에서는 주기적 정례회의를 통해 ZEB와 관련하여 다음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혁신 전담기구 주요 논의 사항]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B 인증기관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ZEB 인증 최소기준 삭제 등 민간 확대에 대비 - 재산세 및 도로점용료 감면,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ZEB 개념을 지구·도시 단위로 확장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 시범사업 - ZEB 특화도시로서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원당수 2지구 시범사업 - 세종 6·3생활권 내 공동주택 최초 ZEB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 등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녹화 및 태양광 패널설치 활성화, ZEB 비용최적화 시뮬레이터 및 자재·설비 등록 포털 고도화, ZEB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소비 분석 등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B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매신저 앱 활용 챗봇시스템 개발, 생활밀착형 대국민 홍보 콘텐츠 기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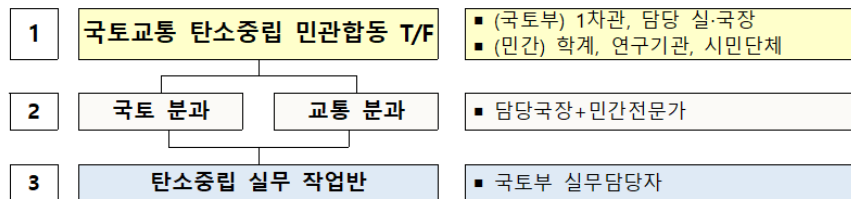
국토부,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민관합동 전담조직 1차 회의 개최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2021.02.08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부문(건물, 수송) 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일정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하여 ① 민관합동 T/F, ② 2개의 분과(국토, 교통), ③ 실무 작업반 등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건물 부문에서는 국토·도시계획부터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성능진단 플랫폼 및 탄소배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수송 부문에서는 광역철도 등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 전기·수소차 전환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 물류 인프라 전반에 걸쳐 대규모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내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건축정책과, 2021.02.16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목표	내용
생활공간 향상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
탄소중립 도시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25년까지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
국가경쟁력 확보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하여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부산시,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생활권계획(시범구역) 확정안」 발표

도시계획과, 2021.02.26



부산시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동네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생활권 계획(시범구역) 확정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주례·개금·가야·당감동 등 4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TF팀 운영 등을 통해 시범구역 생활권계획(안)을 확정했다.

시범구역 생활권계획의 미래상은 동부와 서부의 광역거점을 연결하는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하고 9대 목표(공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도시기능 재정립 등)와 15대 전략(철도와 고가도로로 단절된 지역 간 연계,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 재배치 등)을 제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을 담은 생활 밀착형 도시계획을 제시하였다.

대구시, 서대구역세권 환경개선 위한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 본격추진

미래공간개발본부, 2021.02.02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인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제3자공고를 통해 하폐수 처리의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는 한편, 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올해 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통합지하화사업은 서대구역 준공(2021년)에 맞춰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사업으로서 서대구역 일원 환경개선을 위하여 달서천 하수처리장과 염색산단 1,2폐수처리장을 북부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해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부는 명품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통합지하화사업을 통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북부하수처리장 후적지는 환경친화적인 명품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달서천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 후적지는 역세권 주거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광주시, 빈집 정비 종합계획 수립

도시정비과, 2021.02.04



광주시는 지역 내 빈집 총 2286호의 노후·불량상태, 위해성 등을 조사해 1등급 양호, 2등급 보통, 3등급 불량, 4등급 철거대상 등 4등급으로 분류하고, 올 1월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과 시기 등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시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1~2등급 주택은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3등급 주택은 안전조치를 하고, 4등급 주택은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21억원을 투입해 총 86호*를 정비하고 2022년 210호, 2023년 200호, 2024년 292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 매입 4호, 철거 35호, 안전조치 39호, 리모델링 8호

** 2024년까지 매입 32호, 철거 149호, 안전조치 546호, 리모델링 61호 등 788호 관리정비 계획

울산시, '2050 탄소중립도시, 울산' 선언

환경생태과, 2021.02.04



울산시가 올해를 '2050 탄소중립 울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립해 나간다.

선언 내용은 ①울산형 에너지 대전환, ②혁신적인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③탈탄소 체계로의 도시운영 전환, ④자연 탄소흡수원 (생태백신) 확대, ⑤시민과 기업의 탄소중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2050 탄소중립도시' 선언]

울산형 에너지 대전환	수소산업 육성과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 전환
혁신적인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등으로 친환경 미래 신산업을 활성화해 탄소 발생을 저감
탈탄소 체계로의 도시운영 전환	수소·전기차 보급과 전국 최초 수소트램도입 등으로 교통수송분야 저탄소화를 선도하고,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과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자연 탄소흡수원 확대	태화강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시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저감숲 조성 등 도심 곳곳에 생태녹지를 강화
시민과 기업의 탄소중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탄소중립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운영해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단계별로 점검

울산시,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

건축정책과, 2021.02.25



울산시는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동의와 노후·불량건축물수가 2/3이상이고 호수밀도 등 주거정비지수의 항목별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동의와 노후·불량건축물이 30년 이상이고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의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정비·보전·관리계획, 생활가로계획, 주거지 유형별 관리방향 등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350%로, 최대허용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용적률 특전(인센티브) 완화항목과 범위를 확대하였다.

전북도,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와 코로나 우울증 해소위해 생활권 도시숲 확대 조성

산림복지과, 2021.02.03

진행

도시 정책

환경

전북도는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코로나 우울증 해소에 일조하기 위하여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심 내 유희지, 교통섬과 가로변, 마을 주변 공지 등 거주지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찾고 산책할 수 있도록 쌈지숲 19.2ha, 가로수길 33.2km, 학교숲 19개소, 마을숲 8개소 등 179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형태와 위치의 생활권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차단숲과 자녀안심 그린숲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08억 원을 확보하여 순탄한 전개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및 생활권 주변 도로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차단·흡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올해 새로이 도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친환경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굣길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수벽(樹壁) 및 인근 가로숲을 만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또한, 도시외곽의 맑은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의 오염되거나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전주시 백제대로를 중심으로 바람길숲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발표

공공택지개발과, 2021.02.05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공공임대단지에는 복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공공주택단지에는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조감도]

행안부, 저탄소·친환경 위해 도시 숲 조성 등으로 '녹색청사' 본격 전환

관리총괄과, 2021.02.21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저탄소·친환경 사업과 도시 숲 조성 등을 통해 '녹색청사'로 본격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약 77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 세종청사에 정부청사 주변 울타리 숲 조성,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실내 다중이용 공간 식물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부청사는 저탄소·친환경 사업과 도시 숲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저감 등 도시생활 환경 개선과 그린 뉴딜 사업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미관·에너지효율 개선 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추가지원

주거환경개선과, 2021.02.08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
서울시는 다섯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집수리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2021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내용]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거나 공동주택이 단열·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보조금 지원
- 도시 미관 공사나 창호·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지원금 추가 지급
- '공사업체 등록제' 본격 시행
- 집수리 업체 정보 제공
- 집수리 보조·융자금 지원 신청서 하나로 통합
- 첨부 서류 간소화
- 융자금의 경우, 집수리 공사 시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준 완화
- 건축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집수리 공사, 주택 유지관리법 등에 대해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지원

서울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

재생정책과, 2021.02.16



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어디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골목길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경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방식의 재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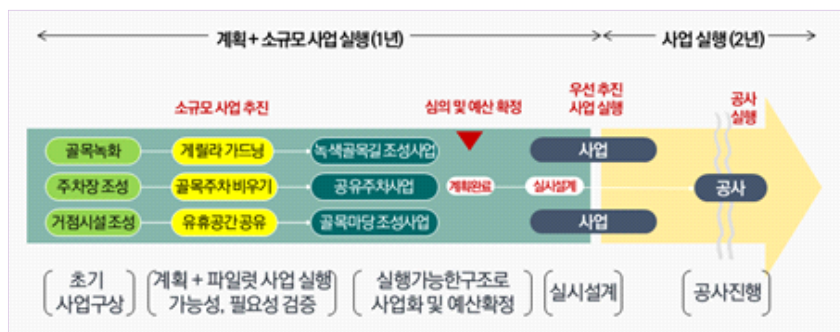
**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조, 공사비용 용자도 지원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0)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피부에 와 닿는 골목길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민들이 골목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다.



[골목길 재생사업 절차]

서울시, 화재사건 비율 높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소방재난본부, 2021.02.25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년간 화재발생 통계 분석과 더불어 ‘안전취약 계층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홀몸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주택용 소방시설 윈스톱 지원센터 운영 강화, 의용소방대 참여 취약주거지역 화재안전 컨설팅, 주택화재 예방 및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집중 홍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홀몸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28,500가구에 가구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설치한다. 또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홀몸 중증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에 주 1회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재해 예방위해 숲가꾸기사업 본격 추진

공원녹지과, 2021.02.16



광주광역시시는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에 들어간다.

올해는 총 350ha에 대해 총 8억원을 투입해 ‘공익림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상반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공익림가꾸기는 7개 지역 180ha(산불예방을 위한 30ha 포함)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는 4개 지역의 생활권 주변 산림 170ha에서 추진한다.

이들 숲에서는 가지치기와 수목 밀도를 조절하고 미세먼지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상층목과 하층목을 적정 관리하게 된다.

울산시, 주택 및 공장 대상 '2021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 확대 시행

도시재생과, 2021.02.03



울산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및 공장을 대상으로 재도색시 ‘울산시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색채 시공 도안 및 적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2021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의 외관 색채가 도시경관의 시각 점유율에 큰 부분을 차지하나 건축물 특성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단순 도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울산색 활용 유도’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부터 관내 모든 단독주택에 확대 시행되며, 공동주택(300세대 미만)과 공장(기업체)은 도장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된 대상에 한하여 지원된다.

경기도, 미세먼지 쉼터. 환기시스템 설치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미세먼지대책과, 2021.02.03



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

미세먼지(PM10) 연 평균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μg), 초미세먼지(PM2.5)는 15 마이크로그램(μg)을 초과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위해 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건축주택과, 2021.02.25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으로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택(숙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까지 농협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경남도는 빈집정비사업으로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주택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 주택은 동당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지원과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비 34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녹지부족 생활권에 자발적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

산림휴양과, 2021.02.10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가 부족한 생활권 주변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권주변에 꽃과 나무 가꾸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사업
주민들이 생활권 주변에 노는 땅에 녹화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공간특성에 맞는 수목·초화류·상토·화분 등 재료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시, 도시 정체성 살리는 특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및 참여 대상지 공모

경관디자인과, 2021.02.03



세종특별자치시가 가로경관을 개선해 매력적인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공모한다.

*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통해 시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

조성사업의 범위는 특화거리를 대표하는 조형물, 대형 상징간판 등 설치, 소규모공원, 분수대 등 시민 휴식공간 및 경관조명 등 설치,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화거리를 희망하는 거리의 상인 또는 주민조직은 신청서와 상인 또는 주민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장소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타당성 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특화거리 사업대상지 2곳을 선정, 전체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1.02.18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21.2.19~3.11)한다고 밝혔다.

①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

도시지역도로는 50km/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③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하여, 30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 제정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하여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서울시, 교통약자위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행

보행정책과, 2021.02.15

완료

도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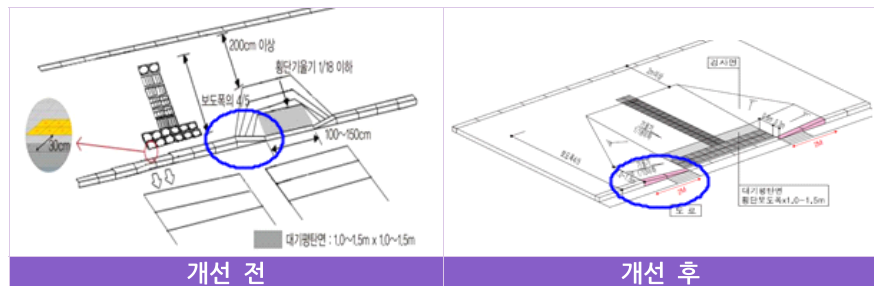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歩道)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 한 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규·지침서를 한권에 담은 종합지침서다. 최초 발행 이후 매뉴얼에 수록(현행화)되지 않은 기 시행사항을 수록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추가하는 등 총 212건을 반영*하여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2.0)’을 새롭게 발행했다.

* 상위법령 개정과 기 방침으로 시행중인 사항(총 207건) 수록(현행화),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제고 등 개선사항(총 5건)을 반영

현행화 내용으로는 도로법 및 KS개정과 투수블록 품질관리 등이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섬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연속 선형블록 설치 규정 추가, 도로경계석 이탈방지 등이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



대구시, 대구도시철도 '5G 디지털트윈 기반' 시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회재난과, 2021.02.26

완료

건축
정책

안전

대구시는 기존 재난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용해 대구도시철도 시설안전을 관리하는 5G 디지털트윈 기반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대구도시철도에 구축한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은 건설 초기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철도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됐다.

5G 디지털트윈 기술은 5세대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과 컴퓨터 등의 가상공간에 실제 시설물과 똑같은 3D 모형도를 만들어 시설물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다양한 모의시험으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기술이다.

대구도시철도 본사에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위한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문양차량기지, 도시철도 3호선 6개 역사에 5세대 초고속 무선통신이 가능한 각종 시설 계측센서와 지진, 화재센서 등을 설치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시각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화재, 연무, 기울기, 진동, 유동인구, 균열 등의 센서를 설치해 평상시 건물변화 분석 및 안전도를 측정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의 정도, 대피 동선, 구조경로 등을 한눈에 파악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명구조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CCTV 통합플랫폼을 연계한 스마트도시 기술로 통합사회 안전망 구축

스마트도시담당관, 2021.02.03



인천광역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전역의 CCTV를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존에 기관별로 흩어진 인천시 전역의 약 16,000개 CCTV를 연계 통합해 시민의 안전, 교통, 시설 등을 24시간 감지분석하고 위급 상황 시 시와 경찰, 소방 등에 실시간 상황 공유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안전망

시는 오는 6월까지 시와 10개 군·구의 CCTV관제센터를 연계 통합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 완료하고, 112·119 종합상황실 및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도,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건축도시과, 2021.02.04



충남도는 도내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공공건축 관리 업무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건축가 및 실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공공건축 사업 단계별(건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세부 추진 절차, 공공건축가의 참여 활동 사항, 관련 법령, 유의 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공건축 사업에 의무화된 건축기획 업무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기획 부분을 특별 구성해 건축기획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전남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해 통합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재난과, 2021.02.24



도시
정책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에 현재까지 전남도(광역형)와 10개 시군이 선정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으며, 총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올 상반기 중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도내 22개 시·군 CCTV 영상정보를 연계한 후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스템은 CCTV영상을 검색하려면 시군 CCTV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지만, 통합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도(재난안전상황실), 112, 119종합상황실, 경찰서, 법무부(위치추적관제센터) 등 관련 기관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도민의 안전·교통·시설 등을 24시간 감지분석할 수 있다.

특히 방범·방재·교통 등 개별서비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112센터 긴급영상·출동, 수배차량 검색,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긴급대응, 전자발찌 착용자 위반행위 시 범죄 예방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 및 8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강진, 영암, 함평, 완도)을 연계했으며, 오는 6월까지 남은 2개 시군(구례, 해남)에 대한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경북도, 지역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기반 마을단위 생활SOC 최적지점 분석

빅데이터담당관, 2021.02.09



도시
정책

경상북도는 빅데이터 기반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생활SOC 최적지점」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국가 최저기준이 도시지역 기준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재설정하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정보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분석했다.

먼저, 생활SOC 대상을 39종으로 확대했다. 국가 최저기준은 29종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버스정류장, 터미널, 미용실, 목욕탕 등 15종은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시설수가 적은 5종은 제외되었다.

두 번째, 생활 SOC 이동시간과 수단은 현실화하였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9종은 도보기준(10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차량기준 이동시간으로 설정했다.

세 번째, 생활 SOC 접근성을 새롭게 적용했다. 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실제 도로망 데이터를 활용·분석해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추정되는 시설을 도출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공급·수요표를 작성하였다. 생활 SOC 시설별로 과부족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인구, 이동거리, 방법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설치 또는 복합화시 최적지점 분석서비스 모형을 개발했다.

경남도, 재난 구조시스템에 활용 위한 3차원(3D) 건축물 공간정보 구축 추진

토지정보과, 2021.02.22



도시
정책



환경

경상남도는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구축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도내 공공건축물 10개소의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축된 공간정보는 우선 소방·재난 부서와 공유하여 신속한 재난 구조시스템에 활용할 계획이다.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은 건축물의 실내를 실제와 같은 3차원 실내 지도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올해 4월까지 10개소 건축물 DB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실내지도를 바탕으로 건축물에 화재·환경·진동 등의 센스를 설치하고 5G 통신 기반 사물인터넷(IoT)을 구현할 예정으로 디지털 트윈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기도 하다.

경남도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도내 청년 20명을 채용하여 3차원(3D) 실내공간 모델링에 필요한 CAD, 3D S/W, LIDAR 측량 등 실무교육을 마치고 건축물 실내외 현장조사, 맵핑자료 수집, 측량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이란?

-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 * 공간정보·행정정보·신공간정보(IOT, SNS 등)과 결합해 사용자 중심의 입체적인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의 핵심 기술

세종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투명성등을 위해 심사위원단 구성·운영

공공건설사업소, 2021.02.21



건축
정책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 심사위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운영해온 제도로, 지난해에는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타워 등 6개 공모사업에서 활용됐다.

올해 심사위원단은 분야별 자격을 갖춘 전문위원 207명으로 구성됐다. 활용 분야는 각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심사를 위해 건축 계획, 구조·시공, 설비·환경, 조경 등 총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시는 설계공모대상 사업 추진 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위원 후보를 무작위로 추첨해 5~9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9 772635 514009
ISSN 2635-5140